

스웨덴 룬드(LUND) 시의 트램건설과 북동부 개발계획

김영일

룬드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재학중

룬드 시는 스웨덴 남부 스콘(Skåne) 지방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는 8만 2,800명(2013년 6월 기준)에 이른다. 인구 규모로는 스웨덴 제10의 도시다. 990년 형성된 이래 1658년까지 스콘 지방의 대부분의 땅과 마찬가지로 덴마크 영토였다. 1080년께 세워진 대성당과 중세 구도심이 주요 관광자원이며, 현재는 스칸디나비아 최대 연구기관인 룬드 대학교와 이데온(Ideon) 과학단지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메디콘빌리지(Medicon Village), 이데온과학단지, 룬드공대(LTH) 등이 위치한 시 북동쪽에 ESS(The European Spallation Source) 및 맥스 제 4연구소(MAX IV 연구소) 등을 포함하는 '사이언스 빌리지(Science Village)' 계획(수립연도 2009년, 2010년~현재 조성 중)을 건설함에 따라 도시확장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추가적인 교통부담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기로 결정, 스포어배그룬드~ESS(Spårväg Lund~ESS, 룬드~ESS 트램라인 건설계획, 2011년)을 수립했다.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선정된 '트램'은 환경적 측면, 도시 개발 촉매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호되는 대중교통수단이다. 실제로 고속 환승 버스(BRT)와 비교했을 때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룬드 중앙역~ESS에 따른 트램 건설사업은 룬드 중앙역에서부터 사이언스 빌리지의 ESS 연구소까지 5.5km 구간(총 9개의 정류장) 건설을 2017년 완공하고, 이후에 인근 도시인 달비(Dalby)와 스태퍼드(Stafford)까지 확장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계획의 예산은 총 7억 2,000만SEK(약 1조 224억원)이며, 최근 룬드 시 의회는 트램 정거장의 세부위치를 확정했다. 앞으로 2014년까지 세부 설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건설기간을 거쳐 룬드 시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서 트램을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이언스 빌리지'와 트램라인 건설계획이 확정된 시점에서 북동부 도시확장 계획과 기존 도시조직 재정비사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시는 '룬드 시 북동쪽 종합 발전계획'(LUND NE)을 수립했고, 트램라인 건설계획을 비롯해 쿤스캅스트로켓(Kunskapsstråket)(룬드 지식 코리도), 브룬스호그(Brunnshög) 개발계획(사이언스 빌리지와 룬드 구도심 사

* 2020년을 기준으로 트램이 연간 2100만SEK, 버스는 연간 1800만SEK의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돼 BRT노선(고속 환승 버스노선)을 추가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Mattias Schiöth, 'Sparvagn Kontra buss, Kapacitet, kostnader och intäkter', 2013, p1, Skanetrafiken(발행기관))

0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도시가로를 디자인하다, Streetmix*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가로를 쉽게 디자인해볼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트리트믹스(Streetmix)가 개발됐다. 사용자는 보도, 차도, 자전거 전용도로, 버스전용도로 등을 설정하고 가로수를 식재하거나 가로시설물을 배치해 자신이 원하는 가로를 쉽게 만들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공유하거나 인쇄할 수 있다. 처음부터 새로운 가로공간을 바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실제 거리에 대해 디자인할 수도 있다.

스트리트믹스의 개발자는 'Code for America'라는 시민단체로,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에서 시민과 정부의 관계를 조율하고 시민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기위해 조직된 단체이다. 스트리트믹스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가로환경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계획주체와의 소통을 돕기 위해 개발됐으며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제약조건이 반영됐다. 올해 초 기획돼 현재 공개 베타 버전에서 800여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3만 7,000여 개의 거리가 업로드돼 있다.



*
<http://www.treehugger.com/clean-technology/reimagine-and-redesign-your-citys-streets-streetmix.html>
http://www.codeforamerica.org/?cfa_app=streetmix

02

세계 도시를 비교하다 『The Urban Observatory』*

지난 50년 동안 리처드 워먼(Richard Wurman, TED 컨퍼런스의 건축가, 그래픽 디자이너 및 설립자)은 1960년대부터 도시 비교 플랫폼 개발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도시마다 사용하는 통계 유형, 원칙, 용어 등이 다르고 각자의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를 비교해서 시각화하기란 쉽지 않았다.

지속적인 연구 끝에 정교한 매핑 도구를 사용해 세계 주요 도시 16곳(뉴욕, 시카고, 런던, 도쿄 등)의 공공 데이터를 도면으로 비교할 수 있는 웹사이트 'The Urban Observatory(www.urbanobservatory.org)'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The Urban Observatory'는 GIS 매핑 기업 ESRI 및 관련 미디어 기업들과 협력해서 개발했고, 2013년 8월 ESRI 국제 유저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다.

웹사이트에 접근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도시 간 도로망, 대중교통망, 오픈스페이스망, 병원, 소방서, 도서관 등 주요 공공시설의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시의 참여를 통해 확대해 나갈 것이며 도시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파악하고, 세계 도시의 통계적 경향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빅데이터 차원에서의 활용도 기대되고 있다.

*
<http://www.archdaily.com/406912/a-new-tool-for-comparing-cities/>

미국 조경가협회, 조경설계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 게시

「Health Benefits of Nature」*

미국 조경가협회 ASLA(America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는 2013년 9월, 새로운 온라인 가이드 「Health Benefits of Nature」를 ASLA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 가이드는 “외부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장기적, 단기적으로 정신과 육체건강에 이롭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건강과 관련된 23가지 이슈에 대한 관련 연구, 통계 및 조사 자료, 조직, 조경설계의 역할, 설계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ASLA의 경영자 낸시 소머빌(Nancy Somerville)은 녹색공간의 이점에 대한 공공 인식을 증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자연공간 및 조경공간을 경험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해 이 가이드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가이드는 ASLA의 지속가능한 설계기법가이드 시리즈 중 하나로, 전문 위원들에 의해 건강관련 23가지 이슈들을 도출하고 각 이슈와 관련된 선도적인 과학자, 연구자들의 백여가지의 자유로운 연구와 관련 뉴스기사, 공원과 조경공간에 대한 사례연구, 조경설계의 역할 등을 구성하였다. 가이드에서는 야생의 자연환경뿐 아니라 조경설계에 의해 디자인된 커뮤니티의 공원과 녹지공간에서 건강상의 이점에 주목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조경설계자들이 지역주민이 자연환경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설계해야 하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을 설계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 가이드는 국민건강차원에서 자연 및 조경공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어떻게 지역사회가 조경설계가와 함께 도시환경과 자연을 통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 조경설계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http://dirt.asla.org/2013/09/10/asla-launches-new-guide-on-health-benefits-of-nature/>

혁신적 도시정책을 소개, 「혁신과 도시(Innovation and the City)」I」*

세계적으로 도시들이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과정이 어떠했는지 등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몇몇의 큰 성과가 있었던 정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성공적인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도시의 담당자들에게도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도시미래센터(the Center for an Urban Future)와 뉴욕 와그너(Wagner) 대학은 시장, 정책 연구소, 기업, 노동조합, 자선단체 등과 백여 회의 인터뷰를 통해 혁신적인 도시 정책을 선정하여 이번 6월 「혁신과 도시(Innovation and the City)」를 발간하였고 8월, 2편을 발간하였다.

2편에서는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를 지양하기 위해 세법을 이용한 펜슬베이니아의 시도, 주차지점 근처에서의 교통체증에 대해 혁신적인 접근을 한 샌프란시스코 사례 등을 조명하였다. 또한 런던의 커뮤니티 기반시설 추가 부담금에 대해 다루어 정책입안자가 수송부문을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주요 기반시설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였고, 고가의 응급실 이용료를 절감하는 뉴저지 캠퍼의 ‘슈퍼 이용자(Super-Utilizers)’라는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 <http://nycfuture.org/research/publications/innovation-and-the-city-part-ii>

01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활성화

‘범죄예방 환경 설계(셉테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좁고 어두운 골목길, 칙칙한 담장 색깔, 관리되지 않은 공터 등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디자인으로 개선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새로운 개념의 디자인 기법으로, 주차장에 접근통제시설이나 보안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며 어린이 놀이터는 각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해 주민에 의한 보호와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시행하거나 이를 강화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등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다.

부산시, CPTED 가이드라인 마련

지난 7월 16일 부산시는 ‘부산광역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 시작했다. 시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규 주거단지 또는 기존 주거단지에 대한 각종 사업계획 시 마련해야 할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준과 방향 및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그뿐 아니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 시·교육청·검찰·경찰 등 4대 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안전한 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부산시 도시경관담당실, 2013.7.15.

경기도, CPTED 디자인가이드라인 개발

경기도에서도 7월 22일 ‘경기도 범죄예방환경설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완료했다. 주변에 상존하는 위협요소를 제거해 범죄 심리를 차단할 수 있는 범죄예방 표준가이드라인, 공간별 디자인 매뉴얼, 범죄예방 체크리스트 활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우선 구도심 주거 정비 사업인 맞춤형 정비사업 대상지 8곳(시흥 은행동, 수원 매산동, 남양주 금곡동, 평택 신장동, 팽성읍 안정리, 시흥 거모동, 은행동, 의왕 이동)과 농어촌건축디자인시범사업 대상지에 셉테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각 시·군이 관련 조례 등을 마련해 셉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셉테드 매뉴얼이 적용된 곳에는 ‘경기도지사 안전마을 인증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디자인담당과, 2013.7.22.

국토교통부, CPTED 반영하여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

지자체에서의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9월 1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건물배치·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범죄예방 계획’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9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2013.9.9.

「경관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경관심의제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되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약하고, 기존 도시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돼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관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6일 공포돼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대규모 SOC, 개발사업, 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경관심의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의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심의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시·도 및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는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3.8.5.

국토교통부, 건축설계산업 육성 산학연관 실행 T/F팀 구성

건축설계는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가 크고,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적 영향력이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업체당 매출 기준으로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불과하며, 발주자들조차 상징성이 높은 대형 랜드마크 건축물은 외국 유명 건축가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건축설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산·학·연·관 T/F팀(9개)을 구성했다. T/F팀에는 국토부, 국건위, AURI 및 민간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등이 고루 참여하고 있으며, 디자인과 기술력 중심으로 발주제도 개선,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 건축설계 환경 개선과 기술력 향상 도모, 건축문화진흥 추진, 해외진출 지원방안 마련 등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지난 8월 9일 Kick-off 회의를 시작으로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그 결과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하위규정 제정 시에 반영될 계획이다. 이번 T/F팀 운영으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의 도출은 물론 실행까지 이어짐으로써 우리 건축설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 세계 TOP 5 수준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2013.8.9.

04

대전시, 1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한 도시디자인 컨설팅 운영

대전시의 경관위원회 및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이 1억 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됨에 따라 1억 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디자인 관리가 어려워졌다.

이에 시는 시와 산하기관, 구 등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의 체계적인 도시 경관 창출을 위해 ‘찾아가는 1:1 도시디자인 컨설팅’을 운영한다. 도시디자인과에 자문단을 구성해 기본경관계획과 도시환경색채기본계획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부서가 시 도시디자인과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설계단계에서는 전화 및 이메일, 상담 등을 통해 조언하며, 공사단계에서는 현장에 나가 디자인에 대한 재료 및 색상, 외부형태 디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시는 이번 컨설팅 운영으로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과 일관된 도시디자인 정책으로 도시 통합 이미지를 구축해 대전만이 가진 특색 있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과, 2013.5.8.

05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을 통한 공간정보의 활용 확대

국토교통부는 고품질 3D 지도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www.vworld.kr)을 통해 더욱 다양한 국가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28종의 국가공간정보를 추가 개방한다.

작년 1월부터 3D 지도, 연속지적도 등 8종의 공간정보를 개방한 이후 금년 말까지 활용도가 높은 산사태위험지도, 하천지리정보, 보호시설도, CCTV 위치도 등 14종을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로써 누구나 공개 프로그램(Open-API)을 활용해 지도와 지도서비스 장비 등을 구매하지 않고도 손쉽게 홈페이지 또는 회사 업무시스템 등에 자신만의 지도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예정인 대부분의 공간정보는 기존에도 일부 기관에 연구목적 등으로 제공되고 있었으나, 이번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을 통해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국가공간정보 활용 영역을 확대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저비용·고효율의 신규 서비스 영역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금년 말까지 추가 개방되는 14종 공간 정보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며, 모바일 API 등 편리한 공간정보 활용기능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2013.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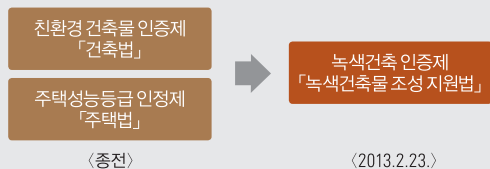
06

통합 녹색건축 인증제 ‘G-SEED’ 공식 출범

그동안 친환경 주택관련 제도로 「건축법」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가 시행돼 왔으나, 그 대상 및 인증 기준에 중복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3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해 건축주의 이중 부담을 완화했다. 새로운 통합 인증제 시행을 위해 세부 운영 관련사항 등을 정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 「녹색건축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6월 28일부터 시행했다.

녹색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 취득 대상을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확대했고, 인증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고, 필요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녹색건축 인증제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 향후 LEED, BREEAM 등 글로벌 인증제와 기술협력 및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013.6.27.

07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9월부터 ‘온라인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사 등 건축허가 신청자는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여부를 검토받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이하 절약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절약계획서 검토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화돼 있는 건축허가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지 못하고, 별도로 전문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관련 도서를 제출해 검토받는 불편함이 있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청-검토-보완-검토완료 등 절약계획서 검토절차를 온라인화해 인터넷 건축인가 시스템인 세움터에 포함시킴으로써 종이서류 미제출, 검토절차 투명화, 검토기간 단축(약 14일 → 6일), 검토기관 방문대기 최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건축물 에너지 절약계획서 온라인검토 시스템’은 올해 초 개발을 완료해 용인시를 대상으로 5월부터 두 달 간 시범운영한 후 시스템을 보완했으며, 9월 1일부터 세움터를 통한 온라인검토시스템을 이용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013.7.19.

08

미얀마 등 개도국 인프라 개발 종합계획 수립 지원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전략’^{*}의 일환인 인프라개발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대상사업으로 ‘남수단 신수도 광역 인프라 건설계획’, ‘나이지리아 라고스市 교통계획’, ‘미얀마 예아와디강 유역 수자원 개발 계획’ 등을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 국토부의 예산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추후 해당 국가들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기업의 수주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선정된 3개 사업은 공기업, 국책연구기관, 관련 협회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총 25건 접수)를 바탕으로, 신시장 개척, 전후방 연계효과(Linkage Effect), 우리나라 강점 분야 및 우리 기업 수주 가능성 등을 토대로 해외건설 전문가들이 심의해 결정했으며, 우리 기업이 국내외 사업경험을 통해 이미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신도시, 수자원, 교통 분야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중점 협력국 등 신시장에서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상기 3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9월 정부 대 정부 차원의 개발협력 협약을 체결했으며, 11월 까지 종합계획 수립 용역 사업자를 확정해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2013.6.27.

^{*}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전략’이란 마스터플랜 등 소프트 인프라(Soft Infra)와 후속 세부사업인 하드 인프라(Hard Infra) 수주를 연계시키는 사업방식으로 우리 정부와 지원대상국 정부 간 정부 대 정부(G to G) 차원의 개발협력(인프라 협력 및 종합계획 지원 양해각서 체결 등)에서 출발해 향후 지원대상국 정부와 우리 기업 간 정부 대 민간(G to B) 차원의 구체적 협력 및 사업 참여 등으로 진행, 필요시 종합계획 수립 후에도 우리 기업의 사업수행과 운영관리 단계에서의 기술·금융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는 구조다.

09

공동주택, 주민이 원하는 만큼 고쳐서 사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6.5 발표)의 후속조치로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이 부담 가능한 범위에서 불편사례를 선택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작·발표한다.

금번 가이드라인에는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등 노후 공동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불편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단지·동·세대 내에서 각각 시행할 수 있는 총 39가지의 리모델링 아이টে에 대한 소개와 공사비 등의 정보가 포함될 예정이다. 단지 내 리모델링으로 △데크·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육시설 및 헬스장 등 확충, 노후상가 철거 후 별도 증축 △아파트 개별 동 내에서는 급·배수관/전기·통신/소방 등 노후 설비 교체, 승강기 신설, 코어 증축(복도→계단식 변경) △세대 내에는 문·창호 및 내장재 교체, 단열·기밀 등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간 재배치 등이 포함된다.

또한 다양한 맞춤형 기법을 제안해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어 장기이주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맞춤형 리모델링을 통해 수직증축과 같은 전면 교체방식의 리모델링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에서도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금번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이후에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공사비를 저리 융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현재 세부내용의 수정·보완 중으로, 10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2013.7.4.

부산시, 장애인 40가구 대상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완료

지난 5월 6일 부산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지원으로 한국 장애인개발원과 공동 추진한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장애인 가구에 개선이 시급한 출입동선, 부엌, 화장실 등 주거공간을 장애상태와 생활패턴에 가장 부합하는 편리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주어 개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부산에 본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지원으로 시작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비장애인 위주의 주택 구조를 장애인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2억 원을 지원했으며 부산시 및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작년 6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부산시 거주 장애인 40가구 내외를 대상 가구로 선정하고 설계 및 시공 등의 절차를 완료해 5월 6일 현판식을 가졌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주 주택은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주택 구조 때문에 주거 약자는 주거 공간에서의 일상생활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약자의 공간복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2013.5.3.

시범한옥 준공 및 한옥관련 법 개정 등 한옥 단신

은평 시범한옥 준공식 개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3일 서울시 은평한옥마을 내 한옥기술개발(R&D)의 중간성과물인 ‘시범한옥’ 준공식을 가졌다. ‘시범한옥’은 2층의 도심형 한옥으로 건축비를 전통한옥 대비 40% 수준(3.3㎡당 685만원)으로 낮추고, 친환경인증 기준의 70%에 해당하는 에너지 효율 성능을 확보했다. 이는 향후 한옥체험관 및 홍보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한옥 기술개발연구단의 연구 성과물은 추후 국가한옥센터 홈페이지(<http://hanokdb.kr>)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2013.8.23.

수원화성 ‘한옥축진 특별건축구역’ 지정

경기도는 지난 7월 23일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팔달구 신평동, 장안동 일원 16만 5495㎡)을 ‘수원화성 한옥축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특별건축구역 내 들어서는 한옥은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인접도로에 대한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권 높이제한 등의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하는 특례사항이 적용된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화성 주변에 아름다운 한옥단지가 들어서면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건축과, 2013.8.2.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한옥밀집지역 맞벽개발 허용

서울시는 지난 8월 1일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한옥밀집지역의 ‘맞벽개발’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역사성 보존 등의 이유로 개발이 쉽지 않아 낙후돼 있던 한옥밀집지역(성북동, 길음동, 체부동 등)의 정비사업이 활력을 얻게 됐다. 이와 더불어 맞벽으로 건축할 경우 문제시 됐던 일조권 관련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